

이 총재, 인하 속도·폭 조정 시사 잠재성장률 훼손 등 리스크 경계

한은 기준금리 동결

금통위원 속도조절 기류 강해져
6명 중 4명, 3개월 내 인하 전망
이창용 총재 “데이터 기반 결정”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수가 5:1에서 4:2로 변화했다.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시기와 폭 등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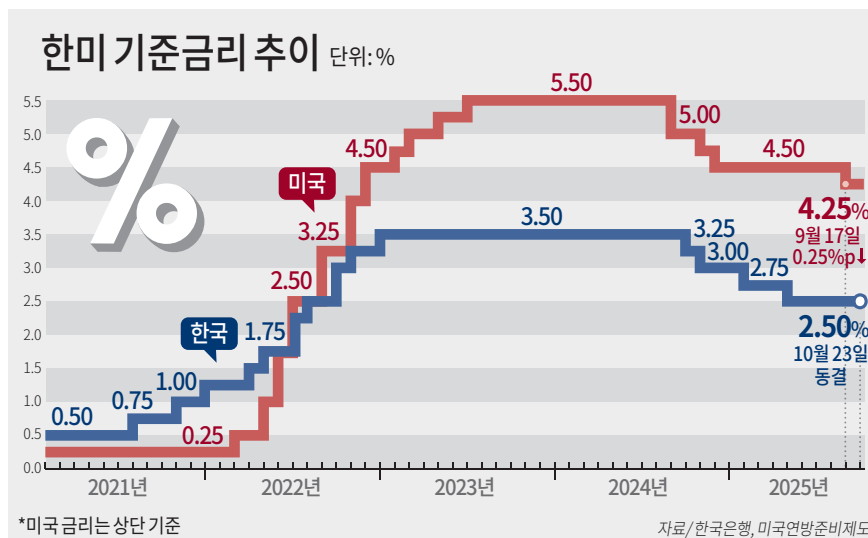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폭은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 이창용 총재 “금리만으로 부동산 가격 조절할 수 없어”

이창용 총재는 국내 물가가 9월 2.1% (근원 2.0%)로 안정 흐름을 보였고 수요 압력 둔화·유가 안정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2% 안팎 등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9월 하순 이후 환율·금리의 변동성이 커졌고 원·달러가 1400원대 초반으로 높아지는 등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 측면에선 수도권 가격·거래가 다시 크게 확대된 만큼 정부의 추가 대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여건은 관세 인상 영향 등으로 세계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물가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 11월에는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10월 FOMC, 반도체 경기 등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 성장 경로 판단에 결정적일 전망이다.

이 총재는 “여러 리스크 전개를 좀 더 점검한 후 기준금리 추가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가계와 관련해 금리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거래·기대 변화까지 종합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수준이 높다”고 했다.

자산시장의 활황에 대해선 광의 통화(M2) 확대의 상당 부분이 과거에 쌓인 유동성 이동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가는 과열로 보기 어렵지만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잠재성장률 훼손을 우려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서두르지 않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물가 2% 안팎의 흐름 아래 소비·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동안 주택·환율 등 금융안정 변수와 대외 이벤트를 보며 데이터에 근거한 속도조절을 이어가겠다는 것.

향후 3개월 금리 방향을 묻는 ‘포워드’는 지난 8월 인하 5명, 동결 1명에서 이번 10월엔 인하 4명, 동결 2명으로 바뀌었다. 인하가 우세하긴 하지만 동결 의견이 늘어 속도조절 기류가 강해졌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6명 중 4명은 2.5%보다 낮은 수준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2명은 3개월 후에도 2.5% 유지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환율에 대해 이 총재는 “특정 수준을 타깃하지 않는다”며 변동성 완화를 정책의 초점으로 제시했다. 최근 한 달 원·달러 상승분에 대해선 “약 4분의 1은 달러 강세, 4분의 3은 역내 요인(위안·엔 약세, 관세·대외 불확실성, 한국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이 컸다”고 분석했다.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원화에 우호적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음 회의 전 관전 포인트는 ▲부동산 대책의 시장 안정 효과(가격·거래) ▲원·달러 및 국고채금리 변동성 ▲소비·수출 지표의 ‘완만 개선’ 지속 여부 ▲무역협상·FOMC의 향방 등이 꼽힌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APEC 정상회의의 관전 이달말 극적타결 관측도

韓美 관세협상

투자방식·수익배분 막판 줄다리기
구윤철 부총리 “혼합 설계 우선”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측 실무진은 쟁점으로 남겨진 후속합의를 위해 워싱턴 D.C.를 바빠 오갔고 진전이 꽤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3500억 달러(5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한 접점 찾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미국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서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국 간 이어진 실무진 대면협상이 이번 주 끝났음에도 이 대통령의 답변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APEC 일정이 임박했음에도 트럼프의 속내·행보는 알 길이 만무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국이고 상식 및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타결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극적 타결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개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보다는 3500억 달러 투자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미국 당국자들도 대규모 선(先)투자 방식이 한국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베센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이어 “한국은 이번 투자 패키지의 균형 잡힌 구성, 즉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형태의 설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구성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는 이견을 이어나가고 있다.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이 미뤄지면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국은 이 같은 불리함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다지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협상단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약속의 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는 원화 약세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환율 불안과 관련해 “최근 원화 약세는 대미투자 협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원화 약세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당국이 의도한 조치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